

오피니언

다산포럼

임현진



올해 5·16 쿠데타가 일어난 지 반세기다. 우리 헌법은 이미 5·16을 더 이상 군사혁명이 아니라 군사정변으로 기술하고 있다. 4·19 학생혁명으로 태어난 민주적 합헌정부를 뒤집어엎고 출발했다는 점에서 박정희 정권은 분명 정당성을 여겨하였으나 이를 경제성장을 통한 효율성으로 만화하려 한 특징을 지닌다.

실상 한국 현대사에서 박정희 정권은 매우 중요한 정치사적·경제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박정희 정권은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을 통해 등장하여, 1972년 '10월 유신'을 통해 민주주의를 억압하면서 초(超)권위주의적 정치체제로 거듭났고, 1979년 10월 26일 불과하기까지 장강 19년이라는 오랜 기간 존속하였다.

박정희 정권의 역사적 의미는, 개발독재 아래 산업화의 기틀을 마련했지만 독재정권의 폭압적 성격이 민주화에 대한 갈망을 길러주었다는 양가적인 평가를 받았을 때 중요하다. 특히 박정희 정권의 유산은 작금의 민주화 이후(post-democratization) 시대에도 정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다.

다시 되돌아 보는 5·16과 박정희

그 이유는 단지 5·16 군사정변의 후에

들이 사회 곳곳에 아직도 남아있다는 사

실 때문이 아니라, 그 당시의 '조국근대화'

의 이념을 구성하는 '발전', '종속', '번공',

'국가', '성장'이라는 언술들이 민주주의 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박정희 정권은 사라진 지 오래지만, 그 유령이 오늘날에도 배회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남긴 이율배반적 유제의 결과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비교시각에서 볼 때, 한국은 권위주의로부터 민주주의의 이행을 빨리 이루었지만, 민주주의의 공고화가 자체된 채 김

영삼 정권·김대중 정권·노무현 정권에 이

르기까지 '부분적 제도화'에 머물렀던 것

도 박정희 정권이 남긴 정치경제적 유산

의 끈질긴 존속력 때문이 아닐까 한다.

현재의 이명박 정권이 중시하는 개발독재식 성장과 반공주의적 안보에서 볼 수 있듯이 박정희 시대의 망령이 다시 살아나고 있지 않다고 부정하기 어렵다. 이는 한국이 앞으로 형식과 실질을 고루 갖춘 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해 박정희 시대의 '19년'이라는 역사적 하중이 아직도 벽검

디는 사실을 말해준다.

박정희는 양면성을 지닌 인물이다. 내가 어릴 때 자주 듣던 얘기 중 하나가 "우리는 조국근대화의 사명을 타고 태어났다"라는 것이다. 일본의 명치유신을 통한 부국강병(富國強兵)의 논리에 매료된 박정희는 한국이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세

계에서 우뚝 서기 위해서 '조국근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그는 조국근대화를 위해서는 자유와 평등이란 이상은 유보되어야 하며 환경과 복지는 사치스러운 가치라고 보았다. 현정질서를 근대화라는 미명하에 잠재운 것이다.

역사는 단절보다 연속이다. 계기가 지워지면서도 누적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역사다. 요즘 일부 논자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역사를 건국,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선진화라는 단계로 구분하는 것은 시대의 변화를 요약하는 장점도 있지만 놀리고 터면서 쌓이는 역사발전의 경험을 읊을 수 있는 암자인이다. 과거의 연장으로서 현재가 존재하듯이 한국의 역사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국가건설, 경제발전, 민족통일, 민주주의, 복지사회 등의 제반 가치가 각축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

해방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는 매우 빠르고 급격하게 진행되어 왔다. 역사의 단축으로 불릴 만하다. 우리는 스스로를 뒤돌아 볼 여유도 없이 앞만 보고 춤기차게 달려왔다. 비록 한국이 개도국의 성공사례로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제 단계를 넘어 통일된 국민국가 아래 민주주의의 내실을 다지고, 자아 충전적 발전을 이루어 내야 할 것이다. <서울대 사회학 교수>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음부즈맨 칼럼

광주일보, 지역사회의 '빛'이 되라



경훈

모름지기 정론창달이라는 깃발을 내걸고 서 전국의 방방곡곡마다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수많은 신문사들이 있다.

나름대로 언론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갖가지 중앙지와, 아울러 해외기조차 힘든 수많은 지방지들이 그것이다.

어떤 신문은 보수적인 성향을 지녔고, 어떤 신문은 진보적인 성향이며, 이와는 다르게 이쪽도 저쪽도 아닌 중도적인 성향도 있다.

광주일보독자위원회로서 처음 볼 때는 이 순간! 우리가 밟고 살아가고 있는 빛고을 광주뿐만 아니라, 호남권을 대표하는

상징성과 전통성을 자랑하고 있는 '광주일보' 속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담아 몇 가지 전하고 싶은 소망이 있다.

우선 이 지역에서만 보더라도 그 규모가 크거나 작거나, 또는 발행부수가 많거나 적거나 간에, 신문사의 간판을 내걸고 있는 언론기관이 꽤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일보'하면 운간 파란곡길에 서린 역사의 현장을 지켜오면서 불굴의 의지로써, 생생한 현장성이 취재보도를 위한 정론직필을 생명처럼 지켜오고 있다고 보인다.

그런 까닭으로 명실상부한 역사성과 전통성을 바탕으로 하여 현존감과 나아가 미래지향성을 추구하고 있는 믿음직한 언론철학에 대하여, 날마다 새로운 마음을 일깨워 가는 바로미터로 삼기도 한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마다 '광주일보'를 펴보며, 제1면에서부터 제20면까지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종교·환경 등과 함께, 투데이·종합해설·지방자치·증집·전남동부권·전남서부권·건강의료·기획종합·TV·스포츠·People&life·Books·소비자·오피니언 등에 대한 고른 편성을 볼 수 있는 순간과 마주하게 된다.

여기서 분야별로 담당하고 있는 기자마다 취재원에 다가서는 태도와 방법의 개별성이거나 독자성이 있겠지만, 이른바 6하위칙(5W1H)에 근거한 주관적 내지 객관적인 시각성에 따라 그 진위의 정도나 차이와 함께 독자층의 수용에 대한 신뢰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할 것이다.

나의 경우에 '광주일보'를 볼 때 유독 시선이 가는 곳이 있다. 우선 세계화의 시대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이웃나라의 생활인이 곧 군모닝 임글리쉬·요하우우니 훈고·니하우 풍구워·한자이야기 등이다. 전문학원 제공의 자료들은 꼭 도움이 되도록

짜인 편집방향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무슨 요행이나 바라고 있거나, 어떤 운명론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천명이 보는 오늘의 운세' 같은 것은 아무도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세상살이다보니, 스스로를 점검하고 일깨워 가는 즐거움을 주는 자료로 삼기도 한다.

우리나라 정치현실이 너무나 과당적이고 배타적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어서인지, 참다움과 거짓스러움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일까 불확실하다. 이와 함께 유착되어 있는 단체와 기업 그리고 응고집적인 지역편향성 등 풀어야 할 공동의 과제가 얼마나 많은가.

특히 안타깝게 선정되지 않았지만 국제과학비즈니스밸트가 유치되도록 광주·전남 250만 서명부가 교과부로 전달되었다는 '광주일보'의 기사처럼 앞으로도 아시아의 중심지가 될 것을 염원하는 광주·전남인을 대변해주는 목탁인 광주일보! 큰 빛을 빛으면 하는 소망이다.

<(사)행복문화사업단 본부장·광주일보 독자위원>

NGO 칼럼



김신희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

어릴적 시골동네 허름한 이발소의 액자에 흔히 볼 수 있는 문구가 있었다. 이 말을 다시 한 번 음미해보면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것은 어찌면 대부분의 NGO단체들이 목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YWCA의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건설이라는 목표의 일부도 평화와 정의가 바로 서게 되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담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의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정

의의 주역 마이어 샌델 교수조차도 정의란 '이것이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정의는 어느 한 사람, 한 가족이나 도덕의 기준에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덕과 종교를 경청하고 존중하는 것이 정의이며 이것이 곧 좋은 삶 행복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본적 소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1년 전 대동 세상을 꿈꾸며 독재에 맞서 싸우다가 장렬하게 산화했던 광주시민들의 목숨을 건 투쟁을 기념하는 5·18기념 주간을 보내며 '진정한 민주주의의 이루어졌는가'를 생각해 볼 때 지금이 땅의 현실은 5·18정신으로부터 멀어진 모습들을 볼 게 된다.

일제 강점기에 독립을 외치고 민주주의를 외칠 때는 공동의 목표가 하나로 모아져 목숨까지도 조개와 같이 여길 정도의 시대적 사명감이 있었지만 다원화시대를 살아가는 현시대는 공동의 선을 찾기가 결코 쉽지 않다. 학벌, 성별, 종교, 세대차이

등등에 따라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때로는 지역 이기주의나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정부나 사회를 향해 부르짖는 주장들이 대중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눈살을 찌푸리게 할 때도 많이 있다.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기본권에 속한다.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자. 혹시 나로 인해 남의 행복을 빼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너무 많이 누림으로 인해 다른 이가 힘들어하고 있는지, 나의 자랑으로 인해 상대적 빙곤감을 주거나 지나친 명품 일색으로 다른 사람의 기회를 죽이고 있는지 않는지 성찰해야 한다. 모두가 행복한 세상은 나눔과 섬김과 살림의 공동체운동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올바른 삶을 고민하고 다른 이의 좋은 삶에 관심을 기울이며 나와는 다른 남의 도덕과 가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한 때다. 다른 이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 나에게도 좋은 삶임을 깨닫고 다른

에 대한 존중과 공동체의 가치가 곧 정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정의는 나에게서 다른 이에게로 마르지 않고 흘러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할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가정의 달에 생각해보는 가족의 가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일 것이다. 모든 인생의 행복의 근원은 가족에서 시작되며 때문이다. 오늘날 가족이 해체되고 존속살인이나 가정불화, 가정폭력, 청소년 가출 등은 거의 대부분이 결손가정이거나 복잡한 가족관계 속에서 나온다.

민주주의적인 생각과 삶의 방식은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생활화되어야 한다. 부부나 자녀 사이에 민주적인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들이 사회에 나와서 조직이나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독선과 아집으로 큰 상처를 주거나 해를 끼치는 사람으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모든 삶의 방식은 훈련이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주적인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가 이 사회를 민주적인 삶의 터로 가꾸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광주YWCA 사무총장>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2-628
팩스 062-222-4918
e-mail opinion@kwangju.co.kr

국내 학위 경시풍조 부르는 석박사 남발 자제했으면

필자의 친동생은 교수의 꿈을 갖고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데 요즘 적잖은 갈등을 겪고 있다. 그 이유는 국내 대학에서 배출한 박사가 너무 많아 아무리 열심히 연구하고 학문적 성과를 낸다 해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대학 입학생 가운데 석박사의 비율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이다. 석박사 학위를 준비하는 대학원생들은 다 아는 일이라

이나 전문성보다는 석박사의 양산체제에 가깝다 보니 진정한 실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누구나 때는 석박사 학위 속에 포함돼 같은 금으로 취급받기 때문이다.

결국, 국내 학위에 대한 경시풍조가 깔려 국내 학위는 무조건 안 맞게 되고 그 때문에 점점 국내 학위의 질이 떨어진다. 그 손실은 전부 우리 학문의 질적 저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우수 인재는 해외로 내보내고, 해외 미인증 대학 출입자에게는 석박사 학위를 너무 쉽게 내주는 국내 대학원들. 정말 이러다가는 우리 학문이 끊임없이 전락해버릴까 염려스럽다.

국내에서 석박사 학위를 따기 위해 그만

쉽다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학문적 회초성

시설

물가 갈수록 '첨첨산중' 근본대책 서둘러라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차 최근 물가에 대한 경고음을 울렸다. 올해 물가상승률을 전망치를 종전 3.2%에서 4.1%로 크게 올린 것이다. 최악의 경우 4.5%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내놨다. 정부가 당초 제시했던 3% 수준 상승률은 물건간 것으로 보인다.

올 하반기에는 물가 상승세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테다. 집세와 개인서비스 요금이 출렁이는 데다 하반기에는 가스, 전기 등 공공요금까지 인상될 소지가 크다. 전기요금은 무려 16.2%의 인상요인이 발생했다. 이미 이달부터 평균 4.8% 오른 도시가스 소매요금도 7.8% 인상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인상 요인은 여전히 남아있다.

지하철, 버스, 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도 하반기부터 줄줄이 인상이 예고돼 있다. 이미 두자릿수 이상 인상된 개인서비스와 가공식품 가격도 겹침을 수 없을 만큼 오르고 있다. 물가 상승이 다른 상승을 부르는 악순환 양상마저 짚고 있다.

고질화된 광주교육계 비리, 이대론 안된다

광주교육계의 수의계약 비리 전모가 밝혀졌다. 23일 광주지방경찰청이 발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전·현직 교장 6명 등 관련자 모두 22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를 가운데 전·현직 교장 2명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전·현직 교장 4명은 불구속 입건, 뇌물 액수가 100만 원 이하인 15명에 대해서는 기관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내놓은 혐의 사실을 보면 이들이 과연 학교장으로서 교육공무원으로서 양심과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업자를 동원해 공짜로 자신의 집 수리를 하는가 하면 수의계약을 할 때마다 공사대금의 10%를 정해 사례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개다가 공사업자가 학교 등 관공서를 마치 제 집처럼 드나들면서 금품도 교육장 직무실과 교장실에서 직접 수수하는 대답함도 보였다. 또 공개 입찰을 피하려고 학교장 재임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공사금액에 맞춰 일정 '조개기 수법'까지 동원했다고 한다. 학교 공사비가 그들에겐 '눈먼 돈'으로 치부됐던 것이다.

가장 신경시해야 하고 학생들에게 사회 정의와 원칙을 가르치는 교육현장이 이렇게 썩어 있었다니 말문이 막힌다. 자고 나면 터지는 교육계의 비리에 학부모나 시민들로서는 참담할 때이다. 교육 행정의 청렴성을 강조해온 장관급 교육감에게도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이제 교육계의 비리는 어떤 식이든 확